

남북, 정상회담 4월27일 개최 합의

실무 회담 4월4일 · 기타 문서교환 방식 협의 등 3개 합의사항 담은 공동보도문 채택... 의제 언급 안 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3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우선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도 갖는다.

남북은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우선 의전, 경호, 보도 실무 회담을 4월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통신 실무 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남북은 공동보도문에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을 꼽은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고위급회담



국회의원 재산 변동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2018년 국회의원 정기 재산변동사항' 관보를 살펴보고 있다.

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운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참석했다. 북측에는 전중수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명일 조평통 부장이 나왔다.

'세월호 당일 청와대 문서' 법원, 비공개 열람 · 심사 요청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보급한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비공개된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9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정보공개 청구된 청와대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측에 비공개 열람·심사를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지정기록물을 재판부에 제출, 비공개 처분이 적법했는지 판단받으라는 명령이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측 대리인은 이날 "비공개 열람심사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정기록물은 접근 금지와 보유 여부 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예외적인 경우 열람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지정 행위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동영, 재건축 · 재개발 '강제퇴거 제한법' 발의

강제집행 시 폭행 · 협박 · 기물파손하면 3년 이하 징역 사업시행자는 거주민에 주택 · 임대주택 · 상가 공급해야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 9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용산참사의 원인이 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강제퇴거 제한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28일 "9년 전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아직도 인천과 안양 등 전국 각지에서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2의, 제3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과정에서 강제퇴거나 철거를 실시할 때 폭행이나 협박,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강제퇴거 제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32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강제퇴거금지법'

을 발의하고,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선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강제퇴거·철거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행이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주민들을 내쫓거나 이를 제3자로 하여금 중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주민의 퇴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창호, 벽, 문 등을 파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거주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인권영향평

가에는 강제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과 거주민의 재정착 지원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임차자금 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기존 거주민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보장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주변 상가에서 영업하는 거주민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상가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정동영 의원은 "유엔은 1993년 강제퇴거를 명백한 인권침해를 규정하고, 특히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작년 10월 한국정부에 강제퇴거에 대한 적절한 절차상 보호 장치를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강제퇴거 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거주대책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강제퇴거 제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중 "한미 FTA 협상서 환율 언급 안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환 정책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환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SNS 온라인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국이 11월 중간선거가 있어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미FTA와 철강, 환율을 묶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에서 외환 정책과 관련해 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은) 축구 뛰고 온 선수에 왜 야구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개 사안이라 언급 안했다. 28일 한미통상장관 개리 발표된 공동선언이 있는데 한미 FTA와 철강232조만 포함됐고 환율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합의를 본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환율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한미FTA와 환율, 철강이 독립된(Independent)사안이라고 했다"며 "요즘처럼 민주화 투쟁화한 사회에서 거짓말 숨길 수 없다. 국회에서 비준 받을 때 모든 것이 공개되는 데 숨겨거나 거짓말 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이르면 내달 2일 출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공동교섭단체가 이르면 다음달 2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늦은 밤까지 협의를 진행,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두 수석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잠정합의문을 발표하며 공동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로, 초대 원내대표(등록대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는 내용 등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양당 공동교섭단체의 국회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다. 약칭은 '평화와 정의'로 정했다. 양당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 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동교섭단체 활동은 '국회 구성 및 운영' 부분과 '대 정책공조 실현에 한정'하기로 했다.

등록 원내대표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맡을 예정이며 향후 등록 시 각 당이 번갈아가며 맡기로 했다. 활동 시에는 장병완 원내대표와 노 원내대표의 공동 대표 방식으로 운영한다. 활동 기한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이다. 다만 임의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 1개월 전에는 상대 당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재조사, 옳은 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한데 대해 "경찰이 14년 전 성폭행 피해를 목숨을 끊은 자매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늦었지만 옳은 일"이라며 무결점 수사를 요청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외면과 방관은 공범의 양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자살한 자매 중 언니는 드라마 기획사 관계자 12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언니는 협박과 경찰의 외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후로 동생이 언니를 뒤를 따르고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등졌다"며 기막힌 사연에 분노한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으로 달려갔고 20만명의 국민들은 경찰의 재수사를 이끌어 낸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식의 소극적 태도가 아닌 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을 내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성폭행 사건 조사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피해자 보호책 등 제도 정비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